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업무의 현안과 해법:
국립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

Problems in and Solutions for Developing Digital Information Resource: the Case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이 제 환(Jae-Whoan Lee)**

〈목 차〉

Ⅰ. 서론
Ⅱ. 전자자료의 구독 현황과 추이
Ⅲ. 전자자료 업무의 행태적 특징
 1. 선정 과정의 비합리성
 2. 계약 과정의 비주체성
Ⅳ. 전자자료 업무의 개선 방향
 1. 기존 업무행태의 배경
 2. 기존 업무행태의 혁신
Ⅴ. 결론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자료 구독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학도서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실체와 원인을 밝혀내고, 개별 대학도서관들은 물론이고 대학도서관계 전체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10개의 거점국립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전자자료 구독 현황과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들 도서관에서 전자자료를 구독하는 과정에서 드러내 보이는 업무행태적 특징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전자자료 구독 행태가 향후 대학도서관과 사서집단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러한 업무행태를 혁신하기 위한 거시적 전략과 미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논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관련 문헌과 통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자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보하였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전자저널, 웹DB, 해외전자정보, 장서개발, 도서관 컨소시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exploring both problems in and solutions for developing digital information resource such as e-journal and Web databases, with the case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In details, identified at the first hand is current situations and major changes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 that Korean university libraries have developed for the recent 10 years(2003~2012). Also investigated is the salient feature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acquiring digital information resource, with emphasis on the work behavioral aspect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negative impacts which the present digital-centered resource development policy might have on the image of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status of academic librarianship in Korea. The final suggestions include both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practical methods at the library level which might be helpful to escape from the dilemma related to developing digital information resource.

Keywords: Academic libraries, University libraries,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Electronic journals, Web databases,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consortium

* 이 논문은 2012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논문접수: 2013년 11월 16일 • 최초심사: 2013년 11월 22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9일

www.kci.go.kr

Ⅰ. 서 론

입구는 넓은데 출구가 없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 업무를 관찰하면서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인쇄저널을 전자저널로 대체하고 웹DB의 구독 종수를 하나둘씩 늘려가지만 몇 년 되지 않아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든다. 한정된 도서관 예산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자자료 구독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구독을 중단할 수도 없다. 자료 이용의 '편리함'에 중독된 고객들이 '과거로의 회귀'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구성원들의 학술자료 이용행태가 이미 달라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자료의 구독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대학도서관들은 통제 가능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있다.

현단계에서 대학도서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다. 자료구입예산 중에서 인쇄자료 구입비용을 축소하거나 공동구매를 통해서 전자자료 구독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물론 오픈액세스 자료의 확산을 통해 전자자료의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노력이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전개되고 있지만 기존 학술정보유통체계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예산 중에서 전자자료 구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해 왔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전자자료의 공동구매를 위해 출범한 국가 주도형 컨소시엄에 대한 대학도서관들의 의존은 구조화되어 전자자료 구독을 위한 보편적 행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인쇄자료 구입비의 축소와 국가 주도형 컨소시엄의 확산이 대학도서관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령, 인쇄자료 구입비의 무분별한 축소는 기본 장서의 부족으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문화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KISTI의 KESLI나 KERIS의 ACE와 같은 국가 주도형 컨소시엄은 대학도서관들의 요구를 구매과정에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계약당사자인 대학도서관을 오히려 주변화 또는 종속화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그 결과, 대안이 부존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도서관들이 늘고는 있지만 그들의 불만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전자자료의 구독을 둘러싼 대학도서관들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도서관경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 또한 출구를 향한 묘책 찾기에 분주하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도서관 실정에 적합한 '전자자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조할 만한 연구자료조차 변변치 않다는 점이다. 전자자료 정책에 관한 논의가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시작된 지 십수년이 지났건만 도서관 현장에서 실무에 참조할만한 연구결과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관련 분야의

www.kci.go.kr

선행연구를 조사해 보니, KERIS나 KISTI 등이 발주한 '국가 주도형 컨소시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정책과제물 대부분이다. 그에 더해 '전자저널의 이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학위논문들이 더러 눈에 뜨이지만,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에 적합한 전자자료 정책의 수립을 위해 참조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자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자 목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전자자료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봉착해 있는 고민의 실체와 원인을 전자자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의 시각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개별 대학도서관들은 물론이고 대학도서관계 전체가 고민의 해결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최근 10년 동안의 전자자료 구독 현황과 변화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어, 전자자료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태적 특징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와 같은 전자자료 중심의 장서개발정책이 대학도서관과 사서집단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전자자료 문제가 대학도서관의 경영적인 고민거리를 넘어 사서의 직업적 위상에까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의 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문제를 논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관련 문헌과 통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전자자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보하였다.

Ⅱ. 전자자료의 구독 현황과 추이[1)]

주지하다시피 전자자료는 접근과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관리를 위한 비용(처리비용, 제본비용, 보존 공간 및 설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구입이 아니라 구독의 형태로 도서관에 도입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상호대차나 원문복사 같은 자원공유서비스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자리한 부정적 요소 또한 결코

1) 대학도서관이 구독하는 *전자자료*는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도서관의 장서개발 측면에서는 전자저널, 전자책, 웹 기반 DB, 전자파일 형태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등을 통칭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이 중에서 웹DB의 경우, 원문(full-text), 정기간행물 기사(article), 서지/색인/초록, 사전, 편람,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근자에 들어 대부분의 전자저널이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되면서 전자저널 DB와 원문(full-text) 웹DB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자료의 범위를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정보서비스 정책 측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저널과 웹 기반 DB(以下 웹DB)로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www.kci.go.kr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행태는 도입속도와 증가율에 있어 도서관선진국들조차 앞지르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술정보 검색 및 이용에 익숙해진 대학구성원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려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대학도서관 운영자들의 논리가 전자자료의 급속한 확충을 경계하면서 소장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권고하는 소수 문헌정보학자들의 제언보다 폭넓게 수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자료의 도입이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음 〈표 1〉과 〈그림 1〉은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지난 10년 동안(2003년~2012년)의 '자료구입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놓은 것이다. 표의 통계에 나타나듯이,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이 지출한 전자자료 구독비는 7년 만에 62억(2005년)에서 186억(2012년)으로 3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쇄본 연속간행물 구독비의 감소추세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구체적으로, 2005년에는 전체 자료구입비의 26.3%에 머물던 전자자료 구독비가 2012년에는 56.7%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인쇄본 연속간행물의 구독비는 57.8%에서 19.2%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인쇄자료의 전자자료로의 대체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자료구입비 중에서 단행본 구입비의 비율 또한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자자료 구입비의 확대가 단행본의 개발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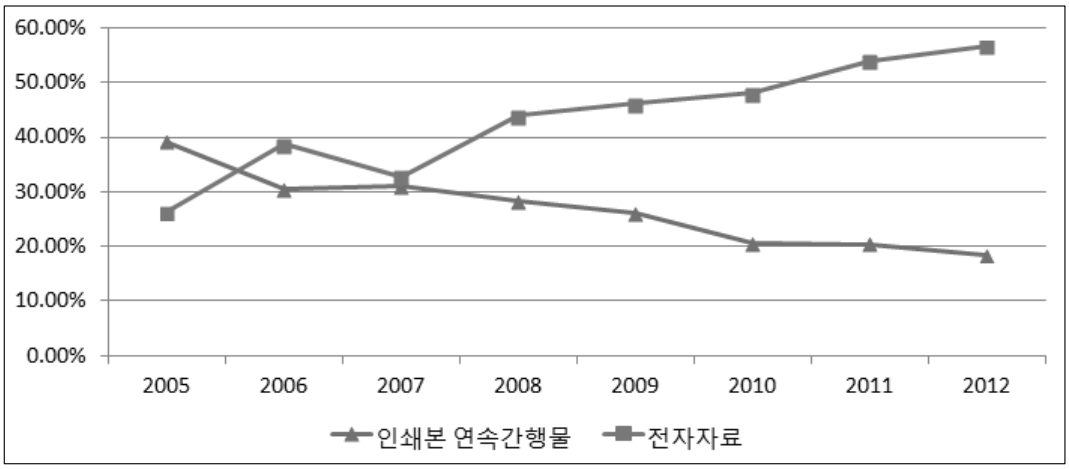
〈표 1〉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변화 추이 (2003년~2012년)

(단위:천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행본	금액	5,730,904	6,124,105	7,359,590	7,434,987	10,175,781	8,860,254	9,454,355	12,340,765	8,312,887	8,579,060
	비율	28.1%	27.1%	31.2%	28.4%	34.0%	24.3%	26.6%	26.0%	23.0%	22.3%
인쇄형태 연속간행물	금액	11,773,092	12,572,953	9,215,880	7,984,350	9,288,452	10,298,194	9,259,724	9,739,449	7,393,872	7,067,695
	비율	57.8%	55.6%	39.1%	30.4%	31.0%	28.3%	26.0%	20.5%	20.5%	18.3%
전자자료	금액	NA	NA	6,197,520	10,143,761	9,788,127	16,006,203	16,425,733	22,800,680	19,532,386	21,831,141
	비율	NA	NA	26.3%	38.7%	32.7%	43.9%	46.2%	48.1%	54.1%	56.6%
기타자료	금액	2,864,731	3,902,021	808,779	659,451	685,127	1,271,879	439,534	2,538,820	893,845	1,072,287
	비율	14.1%	17.3%	3.4%	2.5%	2.3%	3.5%	1.2%	5.4%	2.5%	2.8%
전체 자료구입비	금액	20,368,727	22,599,079	23,581,769	26,222,459	29,937,487	36,436,925	35,585,875	47,419,714	36,132,990	38,550,18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국립대학도서관보 22집(2004)~31집(2013)

www.kci.go.kr



〈그림 1〉 전자자료 구독비율과 인쇄본 연속간행물 구입비율의 변화 추이 (2005년~2012년)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중에서 전자자료 구독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개별 대학도서관들이 거역하기 힘든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대학도서관들이 학술저널을 생산하는 대형 출판사 및 공급사들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오픈액세스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자료 증가 추이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는 부분은 증가 추세 자체가 아니라 증가속도와 증가비율의 '과도함'이다. 예를 들어, 전자자료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의 도서관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인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회원도서관들에서조차 자료구입비 중에서 전자자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2010년 현재 4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까지 매년 30%를 상회하던 전자자료 구입비의 증가율이 2002~200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부터는 10%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이다.[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도서관들이 본격적으로 전자자료의 구독에 나서기 시작한 2005년부터 전자자료 구독비는 급속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KERIS가 발간한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도서관이 지출한 자료구입비 중에서 해외 학술DB의 구독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2005년에 22.1%이던 것이 2012년에 55.5%로 급상승하였다.[3)] 이러한 급증 현상은 이 연구에서 조사했던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2년 현재 전체 자료구입비 중에서 전자자료 구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도서관이 7개관이며, 60%를 상회하는 도서관도 4개관에 이르고 있다(〈표 2 참조〉). 그 중에서도 압권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대표하는 서

2) http://www.arl.org/storage/documents/electronic-materials-increases.pdf [인용 2013. 10. 15].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서울 : KERIS, 2012).

www.kci.go.kr

울대학도서관이다. 서울대학도서관은 2012년 현재 약 92억원의 자료구입비 중에서 무려 70.8%에 해당하는 약 65억원을 전자자료 구독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서울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모델로 삼아온 다른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국립대학도서관계의 전자자료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표 2>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비 변화 추이 (2005년~2012년)

(단위:천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강원대	금액	614,175	787,844	895,194	1,708,698	1,664,549	1,716,989	1,854,655	2,022,265
	비율	42.2%	42.4%	45.7%	50.1%	54.2%	53.8%	54.5%	52.9%
경북대	금액	611,101	758,081	957,730	1,299,131	1,860,937	1,532,392	1,776,379	1,790,135
	비율	22.0%	24.2%	22.5%	27.0%	38.6%	31.1%	35.6%	39.8%
경상대	금액	362,000	482,150	490,420	563,165	1,171,333	1,387,416	1,486,191	1,352,636
	비율	19.8%	25.6%	18.0%	30.2%	54.6%	53.1%	60.0%	61.1%
부산대	금액	1,576,037	2,499,577	1,644,751	2,810,241	2,747,845	2,590,975	2,875,462	3,122,229
	비율	45.0%	58.7%	45.2%	50.9%	53.0%	51.6%	54.2%	52.0%
서울대	금액	1,148,453	1,971,094	1,611,076	3,424,655	1,422,285	8,148,082	4,021,928	5,500,147
	비율	20.1%	32.9%	24.2%	41.7%	20.4%	44.3%	65.5%	66.0%
전남대	금액	–	1,061,015	1,203,641	1,885,083	1,737,824	1,869,284	2,058,078	2,264,249
	비율	–	48.9%	49.4%	63.0%	59.0%	65.6%	63.4%	68.8%
전북대	금액	699,284	895,468	1,059,270	1,200,657	1,829,805	1,882,376	1,747,187	1,910,204
	비율	38.3%	42.6%	36.9%	39.3%	52.4%	52.6%	47.1%	53.9%
제주대	금액	–	347,531	463,076	508,500	915,767	816,467	825,320	677,946
	비율	–	40.2%	45.9%	35.8%	58.9%	48.1%	47.9%	47.9%
충남대	금액	663,000	802,119	868,223	1,763,910	1,942,781	1,808,099	1,731,978	1,809,419
	비율	28.8%	31.0%	31.8%	51.9%	58.0%	58.0%	55.9%	56.2%
충북대	금액	523,470	538,882	594,746	842,163	1,132,607	1,048,600	1,155,208	1,381,911
	비율	39.8%	39.1%	36.1%	48.3%	55.4%	51.7%	56.3%	62.8%

<출처> 국립대학도서관보 24집(2006)~31집(2013)

전자자료 구독비의 증가에 더해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자료의 도입을 경쟁적으로 서둘러 왔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전자자료 구독 종수의 변화이다.[4] 〈표 3〉의 데이터는 2004년 이후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의 증가 추이를 구독 종수를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의 통계에 나타나듯이, 도서관에 따라 증가율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도서관들의 구독 종수가 2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5] 10개 도서관 전체를 합

4) 전자저널 패키지나 웹DB에서 제공하는 학술지의 수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전자자료의 '구독 종수'라는 단순한 지표에 기초하여 증가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비록 단순 지표라 할지라도 전자자료 구독의 증가 추세를 가늠하는 데는 유용하다는 판단에서 이 통계를 활용하였다.

5) 구독 종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보니 일부 도서관의 경우 년도별 구독 종수의 변화

www.kci.go.kr

쳐 볼 때, 도입 초기인 2004년에는 362종으로 도서관 당 평균 36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805종으로 도서관 당 평균 80종을 넘어선 상태이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서울대학도서관의 경우, 구독종수의 증가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다른 대학도서관들의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6] 서울대학도서관의 이러한 구독 행태 또한 다른 대학도서관들의 구독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구독하는 전자자료 종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표 3>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 종수 변화 추이 (2004년~2012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강원대	30	35	40	46	59	70	82	74	74
경북대	37	39	46	56	59	59	69	84	87
경상대	38	34	48	47	50	56	64	61	67
부산대	55	56	46	69	56	68	69	91	93
서울대	47	90	64	86	116	133	146	149	170
전남대	31	43	49	51	47	51	59	57	66
전북대	30	45	59	56	57	61	71	73	78
제주대	22	27	35	44	38	41	41	47	44
충남대	40	39	52	65	78	80	79	52	60
충북대	23	25	33	38	41	49	46	42	66

<출처> 국립대학도서관보 23집(2005)~31집(2013)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전자자료 구독비용의 증가 추이와 구독종수의 증가 추이를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구독종수의 증가가 구독비용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비교에는 우리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자료 정책과 관련하여 당면해 있는 '고민의 실체'가 담겨있다. 즉,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자자료, 특히 전자저널의 가격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대학도서관들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생산된 자료이며, 그러한 해외 전자자료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대학도서관들의 고민은 깊어져 왔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전자자료의 가격이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2013년 현재 벌어지고

가 불규칙해 보인다. 가령, 전 주제를 다루는 통합 패키지 형태의 전자저널을 세부주제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산출한 도서관들이 있었으며, 사서 업무용으로 구독하는 웹DB를 구독 통계에 포함하는 도서관들이 있었다. 또한 KERIS가 국가 라이선스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전자자료나 오픈 액세스 저널 DB(가령, DOAJ)를 구독 통계에 포함하는 도서관들도 있었다.

6) 서울대학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의 종수는 다른 대학도서관들 보다 월등히 많은데, ScienceDirect와 같은 대형 전자저널 패키지에 더해 Project Muse와 같이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전자저널 DB와 주요 학회들이 발간하는 개별 전자저널들을 추가로 구독하고 있으며, 특히, 참고정보소스로 활용되는 다량의 웹DB를 100종 이상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ww.kci.go.kr

있는 국내 주요 전자자료 공급자들의 거침없는 가격상승 요구는 대학도서관들의 고민을 한층 깊게 만드는데 단단히 기여하고 있다. 참고로, 〈표 4〉는 최근 5년 동안 거점국립대학도서관 중의 하나인 P대학도서관이 구독해온 주요 전자자료의 가격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해외 전자자료는 물론이고 DBPIA나 KISS와 같은 국내 전자자료의 가격상승은 웬만한 규모의 대학도서관으로서는 감내하기가 벅찰 정도로 가파르다.[7)]

〈표 4〉 P대학도서관 구독 주요 전자자료의 비용 변화 추이 (2008년~2012년)

(단위:원)

	2008	2009	2010	2011	2012
American Chemical Society(ACS)	47,912,030	75,451,719	78,927,610	91,158,490	103,829,253
EBSCOhost CP	31,532,523	52,169,653	39,642,640	42,405,873	45,169,105
JSTORE	3,206,170	4,357,260	3,960,960	4,700,850	8,210,635
Nature	35,137,390	53,465,404	56,778,610	62,276,750	73,953,000
ScienceDirect	755,068,470	1,299,156,350	1,053,777,410	1,065,652,800	1,137,999,138
Springer eJournal	22,195,750	33,619,450	30,643,160	31,899,510	37,943,680
Web of Science	79,138,880	120,359,355	106,685,700	109,536,300	115,817,895
Wiley Online Library	151,600,952	256,919,486	368,945,510	406,537,520	436,435,322
DBPIA	22,000,000	24,550,000	22,500,000	28,067,500	33,570,000
KISS	19,000,000	22,800,000	27,360,000	32,832,000	39,140,000

〈출처〉 P대학도서관 내부 자료

전자자료의 가격상승이 이렇게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독을 시작한 전자자료, 특히 전자저널은 구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대학도서관들의 고민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 관련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처럼, 학술저널은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료가 아무리 인상되어도 소비자의 이용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단지 유통의 중개자인 도서관의 시름만 깊어질 뿐이다). 이러한 독과점 상태에서 학술저널 공급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학술저널이 전자 형태로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공급자가 갖는 독과점적 힘은 더욱 커진다는데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전자자료의 소비자에게 두드러지는 행태적 특징은 '최소 노력의 법칙'에 따르는 '의존성의 심화'이며, 이로 인해 전자자료의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공급자의 논리와 요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전자자료에는 이렇듯 소비자를 종속적으로 만드는 특성이

7) 물론 해외 전자자료의 가격에 비교할 때 국내 전자자료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에 국내 전자자료의 가격 상승이 대규모 대학도서관들의 전자자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자료구입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규모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매년 20% 내외의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 전자자료 또한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www.kci.go.kr

내재하기 때문에, 일단 구독을 시작한 전자자료의 경우 공급자가 구독가격 및 조건과 관련하여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구매자인 대학도서관에서는 거절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 문제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대학도서관들의 자료구입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전자자료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요구에 대처하는 것이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필자가 지금부터의 논의를 통해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자료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그 특징과 한계에 대해 행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Ⅲ. 전자자료 업무의 행태적 특징

이 연구에서 사례로 삼은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이 전자자료를 구독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필자가 주목한 업무행태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자자료의 선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이며, 둘째는 전자자료의 계약 과정에서 불거지는 비주체성이다. 먼저, 전자자료의 선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태적 특징과 한계에 대해 논의해보자.

1. 선정 과정의 비합리성

> "IMF 위기 때 해외학술지 구독 문제로 폐렴을 심하게 앓으면서 예산문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2000년대 중반에 구독 중이던 인쇄저널을 전자저널로 대체하고 점차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어요. 디지털은 이미 시대의 아이콘이었고 전자저널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대학본부에서도 우호적이었어요. 특히, 빅딜(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전자저널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으로서는 학술지 구독종수를 대폭 늘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컸고, 경영적 측면에서는 종당 학술지 구독단가를 현격하게 낮추게 됨으로써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요. 게다가 다른 대학도서관들과의 장서 확충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저널의 수서 업무를 담당해온 J대학도서관 중견 사서인 L씨의 이야기이다. L사서의 이야기처럼 구독하던 인쇄저널의 전자형태 콘텐츠(DB)에 대한 이용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구독 업무는 시작되었다. 전자저널의 구독 업무는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연속간행물 수서업무의 중심이 되어버렸는데, 그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해외의 대형 출판사들이 채택한 '빅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술지 판매 전략이 있었다. 출판사가 생산하는 핵심 저널의 묶음에 판매량이 저조한 주변 저널들을 더해서 통합 패키지 형태로 도서관에 제공

www.kci.go.kr

하는 '빅딜' 방식은 얼핏 보아 출판사와 도서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출판사의 관점에 볼 때 빅딜은 비용회수조차 힘든 저널들을 염가로 제공함으로써 학술지 구독료 인상에 대한 도서관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송과 클레임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판매 전략이었다. 도서관으로서도, L사서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소뿐 아니라, 학술지의 선정 및 입수 과정에서 사서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빅딜 방식이 학술저널의 출판사나 공급사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판매 전략임은 분명하지만,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폐해가 훨씬 큰 자료구입 방식이라는 점이다.[8]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도서관이 패키지 형태로 구독하는 전자저널 중에서 도서관이용자에 의해 활발히 이용되는 핵심 저널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다수의 주변 저널은 이용자에 의해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즉, 패키지 형태로 전자저널을 선정하는 많은 도서관들이 실질적인 효용성이 낮은 주변 저널들을 '염가제공'이라는 미끼와 '장서확충'이라는 유혹에 이끌려 구독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료구입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딜 방식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자저널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정보요구를 충족하는데 유용한 소수의 논문을 검색하여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패키지 형태의 전자저널 DB는 이용자들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검색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이용자의 연구욕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표 5〉의 데이터는 빅딜 방식의 전자자료 구독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도서관에서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표에 수록한 10개의 전자자료는 빅딜 방식으로 제공되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전자저널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2013년 현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소속 50개 회원도서관들 중에서 절반 정도의 도서관들이 해당 전자저널 패키지를 구독하고 있다. 이 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간 규모 대학의 도서관들은 물론이고 한국교원대나 한국교통대와 같은 특수 목적대학의 도서관들조차 해외 전자저널을 패키지 형태로 구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도서관이 소속 대학의 연구자들을 위해 해외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구독료는 대학구성원의 규모(FTE)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대규모 대학도서관에 비해 과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의 구성원들이 도서관에서 패키지로 구독하는 전자저널을 얼마나 비용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

8) 관련 학자들은 대형 출판사나 공급사에 의한 빅딜 방식의 전자저널 판매가 계속하여 확대되면 우수 학술지를 발행하는 소규모 출판사나 영세 학술단체는 결국 고사하게 되고, 학술지의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궁극적으로는 도서관과 연구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9) Frederick Friend, "Big Deal - good deal? Or is there a better deal?" *Learned Publishing*, Vol.16, No.2(2012), pp.153-155; David Nicholas, et al., "What deep log analysis tells us about the impact of Big Deals: a Case Study of OhioLink," *Journal of Documentation*, Vol.62, No.4(2006), pp.482-508.

www.kci.go.kr

〈표 5〉 50개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패키지 구독 현황 (2013년)

	도서관수	도서관 명칭
ACS	28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경북과기원,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발대, 한국방송통신대, KAIST, UNIST
EBSCOhost Complete P.	31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대구경북과기원,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밭대, 경인교육대, 서울교육대, 진주교육대, 국방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방송통신대, KAIST, UNIST
JSTORE	23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서울교육대, 경찰대, 국방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방송통신대, KAIST
Nature Publishing Group	24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금오공대, 대구경북과기원,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KAIST, UNIST
ScienceDirect	33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경북과기원,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발대, 육군3사관학교, 한국방송통신대, KAIST, UNIST,
Springer eJournal	24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발대, KAIST, UNIST
Oxford University Press	21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대구경북과기원,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KAIST, UNIST
Wiley Online Library	27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발대, KAIST
DBPIA	50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경북과기원,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경인교육대,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서울교육대,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경찰대, 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전통문화학교, 해군사관학교, KAIST, UNIST
KISS	50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경북과기원,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경인교육대,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서울교육대,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경찰대,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전통문화학교, 해군사관학교, KAIST, UNIST

〈출처〉 국립대학도서관보 31집(2013)

전자저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인 업무행태는 웹DB의 선정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자저널의 선정 과정에서처럼 웹DB의 선정 과정에서도 이용자집단을 대상으로

www.kci.go.kr

한 체계적인 '요구조사'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요구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마는데, 가령 웹DB의 잠재적 이용자들 중에서 이용빈도가 가장 큰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를 행하는 대학도서관은 찾을 수 없다. 단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교수 혹은 학과 앞으로 메일을 보내 구독을 원하는 웹DB를 도서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메일도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다보니 요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교수들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소수 교수들의 답변을 근거로 웹DB의 선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노정되고 있다.[10] 이렇듯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자자료 담당 사서의 판단이 전자자료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업무행태이다.

이러한 업무행태가 '바람직하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전자자료 담당 사서들이 웹DB, 특히주제별 웹DB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와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전자자료 개발원칙과 비용효과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C대학도서관에서 전자자료 업무를 2년째 담당하고 있는 J사서의 이야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 "사실 지금 구독하고 있는 웹DB의 절반 이상은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던 인쇄형태의 참고문헌을 대체한 것이에요. 그 외에 추가된 웹DB는 제 전임자들이 선정한 것들인데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한 웹DB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전자자료 개발 업무를 담당한지 이제 2년째인데 주제별 웹DB, 특히, 새로운 웹DB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신규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학도서관, 특히, 경쟁 상대인 대학도서관이나 S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웹DB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요. 기존에 구독하던 웹DB는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재선정하고요."

웹DB를 비롯한 전자자료의 선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담당 사서의 전문성과 그러한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고백이다.[11] J사서의 이야기는 그가 근무하는 C대학도서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 대부분이 유사한 처지에 있었다. 앞서 〈표 1〉과 〈표 2〉의 통계에서 확인하였듯이, 2012년 현

10)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용자 요구조사의 폐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가령, 도서관의 요구조사에 민첩하게 반응하거나 '큰 목소리'를 내는 교수 혹은 학과 위주로 전자자료의 선정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의 학문분야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1) 우리나라 국공립대학도서관의 현실에서 순환보직제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은 사서의 전문성 개발에 치명적 장애가 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제 전문지식은 차치하고 전자자료에 대한 지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서들에 의해 자료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www.kci.go.kr

재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이 자료구입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은 187억원에 이른다. 그처럼 막대한 금액이 전자자료 구독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전자자료의 선정 업무가 담당자의 전문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경쟁 구도에 있는 다른 대학도서관들이 구독하는 전자자료를 '앞다투어' 선정하는 업무행태는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전자자료 선정 과정에서 노정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업무행태는 결국 해당 전자자료의 저조한 이용률로 결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과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자료의 선정 과정에서 부각되는 또 하나의 부정적 업무행태는 기구독 전자자료의 '재선정' 과정과 관련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용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요구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도서관들이 재선정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지표는 전자자료의 이용통계이며, 그중에서도 비용효과적인 속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CPA(Cost Per Article), 즉, 논문 편당 가격'이다. 가령, 어떤 전자자료의 CPA가 몇 년에 걸쳐 하향곡선을 긋는다면 해당 전자자료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했거나 아니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저렴해 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자료 공급자들 모두가 표준화된 이용통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 공급자들이 도서관에 제공하는 이용통계가 단순한 검색건수인지 혹은 원문의 다운로드건수인지조차 불명확하며, 게다가 그들이 설정한 이용기간 또한 상이한 상태에서, 전자자료의 재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이용통계(특히, CPA)를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12] 실제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자저널 출판사로부터 이용통계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1%가 넘는 도서관들이 "출판사마다 제공하는 통계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서 비교가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실정이 이렇다보니 전자자료 업체들이 CPA 관련 데이터를 대학도서관에 제공해 주어도, 이 데이터를 전자자료의 재선정을 위한 핵심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드문 형국이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이러한 CPA 관련 데이터를 전자자료의 계약을 위한 가격협상 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하여도 다른 대학도서관들의 CPAs 혹은 평균 CPA가 함께 제공되지 않다보니 그 활용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표 6〉는 P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주요 전자저널의 CPAs가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전자저널의 출판사마다 CPA의 산출 근거가 상이하고 CPA의 변화가 불규칙하다. 이는 CPA의 산출 근거로 검색건수를 활용하는 업체와 다운로드건수를 활용하는 업체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구독료 인상이 가파른

12) 물론 KESLI와 같은 컨소시엄을 통해 구독하는 전자자료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보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객관적인 이용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대학도서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용통계의 확보가 멀지 않아 가능해질지 모른다. 정영미, 김정환, "컨소시엄 기반 전자저널 이용통계 수집 및 분석 개선방안," 정보관리학회지, 제29권, 제2호(2012), pp.7-25.

13) 황옥경,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이용통계 제공 및 활용 현황," 정보관리연구, 제38권, 제4호(2007), pp.68-87.

www.kci.go.kr

상태에서 이용률의 증감 또한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자자료 공급사가 제공하는 CPA를 전자저널의 비용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성과 신뢰성의 강화'부터 선결되어야 한다.

<표 6> P대학도서관 구독 주요 전자저널의 CPA 변화 추이 (2008년~2012년)

(단위:원)

	2008	2009	2010	2011	2012
ACS	909	1,293	1,091	1.025	1,301
EBSCOhost CP	779	1,630	815	1,250	1,160
JSTORE	300	397	250	1,349	895
Nature	1,778	1,676	1,446	1,299	1,535
ScienceDirect	1,600	2,634	2,175	2,098	1,990
Springer eJournal	571	611	494	376	594
Web of Science	3,593	4,233	2,576	1,982	2,256
Wiley Online Library	2,855	6,530	4,364	4,128	3,783
DBPIA	54	69	60	73	98
KISS	47	108	86	107	225

<출처> P대학도서관 내부 자료

2. 계약 과정의 비주체성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자료의 구독 과정을 관찰하면서 필자가 주목한 또 하나의 행태적 특징은 공급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주체성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연간 막대한 구독비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구매주체인 대학도서관의 업무행태에서는 공급자인 출판사의 논리와 조건에 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모습과 KESLI나 ACE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동시에 불거진다.

먼저, 전자자료의 계약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의 업무행태가 얼마나 수동적인지는 공급자와 구독가격 및 이용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론, 컨소시엄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전자자료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이 전자자료 공급자와 직접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사례는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전자자료 공급자와 컨소시엄 사이의 양자 협상이든, 이들에 더해 도서관이 직접 참여하는 삼자 협상이든, 대학도서관들은 물론이고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조차 협상 과정에서 항상 '주변적' 위치에 놓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구독가격 및 이용조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자자료의 '판매가격'은 거의 대부분 공급자에 의해 제시되

www.kci.go.kr

고 공급자의 논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용조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급자가 제시하는 몇 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공급자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어, 구매자인 대학도서관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렇듯 국내외 자료를 막론하고 전자자료 협상의 주도권은 거간꾼인 컨소시엄이나 소비자인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공급자인 출판사나 중개업자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립대학도서관의 경우, 구매하는 거의 모든 자료나 설비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협상은 철저한 (공개경쟁 혹은 제한경쟁 형식의)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가격이 절대 변수인 경우에는 최저가낙찰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도서관의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에 따라 공급자가 선정된다. 즉, 도서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적정 가격'은 도서관에 의해 제시되고 구매조건 또한 도서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전자자료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자형태의 학술자료 공급자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그러한 독과점은 소비자집단의 '정보종속성'이 심화될수록 더욱 강화되는 속성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칼자루를 쥔 전자자료의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최대화하여 판매가격(전년대비 인상률) 및 이용조건을 제시한다. 반면에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이용조건을 최적화하기를 원하는 대학도서관들(혹은 그들을 대신하는 컨소시엄 주관기관들)은 공급자를 상대로 '칼끝 싸움'을 벌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별 소득 없이 공급자의 논리와 판매조건에 승복하고 만다.

이렇듯 전자자료 구독 협상의 주도권이 철저히 공급자에게 쏠려있다 보니 가격인상의 근거가 불확실하고 이용조건이 비합리적인 경우에도 소비자인 대학도서관들은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급자들이 우리의 대학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서구형 가격모델을 제시하여도, 기구독 인쇄저널을 토대로 하여 전자저널의 가격을 책정하여도, 전자저널에 더해 인쇄저널의 병행 구독을 강제하여도, 이용자 산정에 적용하는 FTE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여도, 가격인하를 미끼로 장기계약을 부추겨도, 대학도서관의 규모나 특성을 무시한 단형적인 구독조건을 제시하여도, 아카이빙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도, 심지어 계약 시에 제공하기로 한 저널들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구매의 주체인 대학도서관들은 물론이고 대학도서관들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컨소시엄조차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퍼 갑'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전자자료 공급자들이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어, 계약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 구매자인 대학도서관들끼리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협상 능력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개별 대학도서관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개별 대학도서관들의 협상력을 보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된 전자자료 컨소시엄의 주관기관들마저 공급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7〉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KISTI의 KESLI와 KERIS의 ACE가

www.kci.go.kr

주관하는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 2013년 현재 거의 모든 4년제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자료 구독 계약을 위해 이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표 7〉 KESLI와 ACE 컨소시엄 참여기관 변화 추이 (2002년~2012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KESLI 참여기관 수	268	280	302	327	379	402	412	386	382	526	542
ACE 참여대학 수	132	142	147	143	158	163	170	187	201	197	203

* KESLI 데이터는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이중 절반이 대학 관련 기관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자료 구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들 양대 컨소시엄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지는 〈표 8〉의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10개의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 중에서 서울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자료의 60% 내외를 KESLI, ACE, 그리고 KMLA를 통해 구독하고 있다. 세 컨소시엄 중에서도 특히 KESLI와 ACE 같은 국가기관 주도형 컨소시엄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도서관선진국의 대학도서관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나 비영리 학술재단 등이 주관하는 민간주도형 컨소시엄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모습과는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14)]

〈표 8〉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 방식 (2013년)

	KERIS ACE 구독		KISTI KESLI 구독		KMLA 컨소시엄 구독		세 컨소시엄 구독 DB 합계		전체 구독 DB	
	종수	비율	종수	비율	종수	비율	종수	비율	종수	비율
강원대	17	23.0%	34	45.9%	2	2.7%	53	71.6%	74	100.0%
경북대	23	26.4%	31	35.6%	3	3.4%	57	65.5%	87	100.0%
경상대	10	14.9%	25	37.3%	3	4.5%	38	56.7%	67	100.0%
부산대	28	30.1%	33	35.5%	6	6.5%	67	72.0%	93	100.0%
서울대	21	12.4%	28	16.5%	2	1.2%	51	30.0%	170	100.0%
전남대	19	28.8%	24	36.4%	3	4.5%	46	69.7%	66	100.0%
전북대	19	24.4%	29	37.2%	0	0.0%	48	61.5%	78	100.0%
제주대	12	27.3%	16	36.4%	2	4.5%	30	68.2%	44	100.0%
충남대	17	28.3%	23	38.3%	2	3.3%	42	70.0%	60	100.0%
충북대	14	21.2%	22	33.3%	2	3.0%	38	57.6%	66	100.0%
합 계	180	23.7%	265	35.2%	25	3.4%	470	62.3%	805	100.0%

<출처> 국립대학도서관보 31집(2013)

14) ICOLC(국제도서관컨소시엄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세계적으로 약 140개의 컨소시엄이 운영 중이며, 도서관협의체나 비영리 학술단체 등이 운영하는 컨소시엄이 전체의 약 80%에 이른다.

www.kci.go.kr

KESLI나 ACE 같은 기존 컨소시엄에 대한 대학도서관들의 의존도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컨소시엄에 대한 대학도서관들의 의존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공동구매가 활성화됨으로써 개발 대학도서관의 구독비가 절감되고, 컨소시엄이 가격 및 조건 협상의 상당 부분을 주도해 줌으로써 개별 대학도서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데, 컨소시엄에 대한 의존도가 아무리 커진다 한들 대학도서관들 입장에서 그것이 무슨 고민거리가 되겠는가? 문제는 이들 컨소시엄이 최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충실히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대학도서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있다. 불만의 핵심은 대학도서관들이 기대했던 만큼 컨소시엄 주관기관들이 대학도서관계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K대학도서관에서 전자자료 구독 업무를 4년째 담당하고 있는 K사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 "0000 컨소시엄의 경우, 도서관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지,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혼동될 때가 많아요. 구독조건이 도서관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몇 차례 경험하고 나니 해당 컨소시엄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국가주도형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부터 우리 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비용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물론 개별 전자저널이나 웹DB의 구독가격이 다운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자저널이나 웹DB의 비용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나서서 참여 도서관들이 막대한(?) 비용을 절약했다고 과대 홍보를 하는데서 비롯돼요. 그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도서관들에게는 은근히 참여를 강요하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들에게는 보다 많은 전자저널이나 웹DB를 계약하도록 경쟁을 부추기는 태도를 보여요. 그 결과, 불요불급한 전자자료를 계약하는 도서관들이 늘어나고, 한번 구독한 전자자료는 중단하기 어려워지면서 도서관들은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기존 컨소시엄 주관기관들이 대학도서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으며, 특히 공급자와의 가격 및 조건 협상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전자자료 구독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으며 오히려 과잉 구독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결국, 컨소시엄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는데 반해, 컨소시엄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과 불만이 K사서의 사견에 그치지 않음은 K사서가 제기하는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대표적인 컨소시엄 주관기관인 KESLI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15]

대학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국가주도형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얻는 것 못지않게

15) 이용구, 박성재, 김정환, "KESLI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운영현황 및 요구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2013), p.231.

www.kci.go.kr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기존 컨소시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구독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구매자인 자신들이 '주변화' 되어버린 상황을 대학도서관들은 비로소 실감하고 있다. 특히 인쇄자료의 구매 과정에서 스스로 개발하고 구축해온 공급자들과의 협상 역량조차 상실해 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실질적인 구매자인 대학도서관들의 목소리보다 거간꾼에 불과한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목소리가 협상 과정에서 훨씬 커져 있으며, 그러다보니 전자자료 공급자들도 대학도서관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기보다는 컨소시엄 주관기관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매자인 대학도서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공급자 친화적으로 변해가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Ⅳ. 전자자료 업무의 개선 방향

그렇다면 전자자료 구독 과정에서 불거지는 '비합리적이고 비주체적인' 대학도서관들의 업무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학도서관들이 실질적인 협력에 기반하여 전자자료 구독 업무를 합리적이며 주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특히, 전자자료 컨소시엄을 참여기관 친화적으로 혁신하여 공급자들과의 협상과정에서 대학도서관들의 입장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만들려면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가? 지금부터의 논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법을 실무적인 차원과 정책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데 주어질 것이며, 그 첫 번째 작업은 현재의 '비합리적이고 비주체적인' 업무행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1. 기존 업무행태의 배경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자료 구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주체성을 잃어가게 된 배경에는 대학도서관계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와 기존 컨소시엄의 태생적인 한계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대학도서관들은 전자자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기 위한 철학적, 정책적, 실무적 고민과 대처에 철저하지 못했으며, 대학도서관정책을 주도하는 국가기관들은 대학도서관들의 역량 강화보다는 자신들의 입지 강화에 에너지를 쏟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통해 전자자료 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도서관을 위한 경영전략과 실무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문헌정보학자들은 자신들의 책무에 소홀하였다.[16] 이처럼 전자자료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16) 김상준,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정보관리연구, 제41권, 제4호(2010), pp.110-112; 이란주, "전자저널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2호(2013), pp.247-268.

www.kci.go.kr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실무현장(즉, 대학도서관계), 정책기관(즉, 교육부, KERIS, KISTI 등), 그리고 관련 학계(즉, 문헌정보학계) 모두가 전자자료와 관련된 대학도서관계의 고민을 심화하고 구조화하는데 일조하였다.

가. 대학도서관계의 구조적 한계

학술활동을 위한 정보자료의 전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80년대 후반 무렵, 많은 학자들은 이미 인쇄자료의 보완재로 등장했던 전자자료가 머지않아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매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때부터 서구의 도서관계와 관련 학계에서는 전자자료의 확산을 도서관경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메가톤급 변수로 보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은 '소장 대 접근'이라는 장서 관련 이슈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도서관의 공간, 시설, 서비스, 인력, 그리고 재정에 이르기까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는 대학도서관 현장과 관련 학계에서 폭넓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자료의 전자화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그러한 전자자료의 공급자들이 합병과 인수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룡으로 성장하면서 '학술자료의 자유롭고 평등한 유통'을 주창해온 대학도서관들은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2013년 현재, 서구의 대학도서관들은 거대 출판 자본의 욕심과 횡포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자자료 정책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고자 중지를 모으고 있다.

서구의 대학도서관들이 이처럼 전자자료 공급자들의 탐욕으로부터 대학도서관의 '위엄과 존재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우리 대학도서관들은 무엇을 하였든가?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관리자들은 물론이고 실무 사서들 사이에서 전자자료의 도입과 확산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전자자료 문제에 내재해 있는 위험의 본질조차 깨닫지 못한 채 디지털에 매몰된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는데 바빴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관리자들의 관심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도서관들에 앞서 보다 많은 전자자료를 도입하는 방법을 찾는 것과 '도입을 위한 예산'을 대학본부로부터 확보해낼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한 그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많은 전자자료를 구독하게 된 이후부터는 매년 급증하는 전자자료의 구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묘수찾기'에 나서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 행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는 K대학도서관에 근무하면서 후일 대학도서관협의체 차원의 전자자료 업무에 참여했던 H사서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자.

"10여년전 제가 장서개발팀에서 전자저널 구독 업무를 맡았을 때가 해외저널 출판사들이 인쇄저널에 전자파일을 묶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사실 인쇄저널 구독 업무가 만만치 않았어요. 물론 상당수의 저널은 대규모 유통업자를 통해 구독했지만, 출판사와 직접 거래해야 하는 저널도 꽤 있었거든요. 일일

www.kci.go.kr

이 선정하고,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입수확인하고, 클레임하고, 다시 연락하고 하는 일들이 무척 복잡하고 번거롭거든요. 그러던 차에 해외저널 가격이 계속하여 치솟자, 관장님과 과장님이 인쇄저널 시대는 이제 끝나가니 전자저널로 교체하기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담당자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널 구독업무가 대폭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왕 해야 하는 거라면 다른 도서관보다 앞서 가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어요. 게다가 출판사나 유통업자들은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지, 이용자들도 전자저널을 선호하지..... 물론 나중에 가격인상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해서 다소 꺼림칙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지불할 것도 아니고 예산문제는 관리자들이 알아서 할 거라 생각했어요."

H사서와의 면담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인쇄저널의 가격인상이 가파르고 서고공간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도서관 관리자에게 인쇄저널의 전자저널로의 대체는 훌륭한 돌파구가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저널 구독업무가 훨씬 간편해지니 실무 사서들로서도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색인과 초록을 비롯한 각종 참고문헌 또한 마찬가지였다. 인쇄본 자료는 관리가 번거로웠고, 이용자들은 전자형태를 선호하였다. 실정이 그렇다보니 우리 대학도서관계에서 인쇄자료의 전자자료로의 대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속도와 규모가 너무 과하다 보니 전자자료의 확충에 대비한 경영전략과 실무방안을 준비할만한 시간과 여력이 없었다. 전자자료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지침서의 개발도 따르지 않았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조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자료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경영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실무적 단계에서도 전자자료의 도입을 위한 준비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환보직의 관행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전자자료 구독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서들에게 업무수행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기대하고, 심지어 합리성과 주체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차라리 과욕이자 몽상이었다. 게다가 협력보다는 경쟁을, 공유보다는 독점을 암묵적으로 부추겨온 우리 대학도서관계의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개별 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담당 사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더불어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더해 우리 대학도서관들의 대부분이 도서관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결여한 비전문직 관장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자료 정책이 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강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하였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대학도서관들이 도서관선진국의 대학도서관들과는 달리, 전자자료 구독을 위한 컨소시엄을 스스로 설립하여 주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KERIS나 KISTI 같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온 구조적 한계인 것이다.

나. 기존 컨소시엄의 태생적 한계

그렇다고 해서 KESLI나 ACE에 앞서 우리 대학도서관계에 해외 학술DB를 공동구매하기 위한

www.kci.go.kr

목적에서 결성했던 컨소시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7년에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 산하 전산화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구성했던 KUCED(Korea University Consortium for Electronic Databases)는 우리 대학도서관계 최초의 해외 학술DB 공동구매를 위한 컨소시엄이었다.[17] 그러나 이 컨소시엄은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가정보화기금의 용처를 찾던 과정에서 급조되었다가 3년 만에 해체됨으로써 대학도서관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지속되기를 기대했던 현장 사서들에게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KUCED가 해체되던 당시,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는 해외 학술DB의 공동구매를 위한 협상업무를 국가기관인 KERIS가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KERIS가 대학도서관계를 대신하여 해외 학술DB의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는 이렇듯 대학도서관협의체의 의뢰가 있었다.[18] 그러나 또 하나의 컨소시엄인 KESLI는 KERIS의 ACE와는 출범 배경부터 달랐다. KESLI는 KAIST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던 국가과제, 즉,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NDSL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KESLI는 과학기술분야의 해외 전자저널을 국내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기관들이 공동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다.[19]

이렇듯 ACE와 KESLI는 출범 배경과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ACE는 대학도서관네트워크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해외 학술DB를 국가라이선스나 공동구매를 통해 대학도서관계에 보급하는데 주력하였고, KESLI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들을 위한 해외 전자저널의 공동구매 협상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전자자료 컨소시엄이 이원체제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늘 그렇듯이, 양대 컨소시엄의 기능 중복 문제가 정책관련자들에 의해 거론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적자생존을 위한 '영역 경쟁'이 두 컨소시엄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두 컨소시엄이 무한 경쟁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직의 안정성에 있어 상대적 우위에 있던 KERIS의 ACE보다는 한시적인 국가프로젝트로 출범하여 입지가 불안정했던 KESLI의 적극적인 행태가 두드러졌다. 그 과정에서 KESLI는 모체를 KISTI로 옮겨 국가기관에 기반한 컨소시엄으로 거듭났으며, 지속적인 영역 확장을 시도하면서 해외 전자저널을 넘어서 웹DB, 국내 전자저널, 전자책까지로 대상을 넓혀갔으며, 주제 영역 또한 과학기술분야를 넘어서 전체 학문분야로 넓혀갔다.

---

17) KUCED는 주요 해외 학술DB를 3년간(1998년-2000년) 구독하는 계약을 통해 국내 대학도서관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구독한 학술 DB는 Web of Science, IDEAL, Ei-Village, Search Bank 등이었다.

18) KERIS가 대학도서관들을 위한 해외 전자자료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한 해는 1999년이었다. 첫해에는 38개 대학도서관이 참여하여 7종의 해외 서지 DB를 공동구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컨소시엄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참여 대학도서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약 300여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207종에 이르는 해외 DB를 공동구매하는 컨소시엄으로 성장하였다.

19) KESLI는 출범 첫해인 2000년에 6개의 해외 전자저널 출판사와의 컨소시엄으로 시작하여 2013년 현재 570개 넘는 기관(그 중 대학은 263개)이 참여하여 200여종에 가까운 해외 전자자료의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컨소시엄으로 성장하였다.

www.kci.go.kr

그러나 KESLI의 적극적인 영역 확장은 긍정적인 기여 못지않게 부정적인 폐해를 대학도서관계에 가져왔다. 가능한 많은 전자자료 업체를 컨소시엄 공급사로 확보하고 그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늘리려다보니 참여기관들의 요구보다는 공급사들의 요구에 밀착하는 경향이 KESLI 운영자들 사이에 농후해졌다. 그로 인해 일부 해외 전자자료의 가격이 공급사의 요구에 따라 터무니없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결국에는 개별 대학도서관들의 구매력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의 해외 전자자료 구매력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20] 게다가 KERIS의 ACE가 온전히 대학도서관계를 대상으로 기능하는 것과 달리, KESLI 참여기관들은 유형이 다양하여 대학도서관들의 요구를 협상 조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다. 이처럼 KESLI는 출범 당시부터 대학도서관들보다는 과학기술연구기관들을 주요 서비스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었기에 대학도서관계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협상 과정에 반영하는데 있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에 더해서 컨소시엄 운영 인력의 '업무역량 부족'은 컨소시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전자자료 공급사와 구매기관의 수는 급증하였지만 컨소시엄의 인적 역량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ESLI의 경우 KISTI로 옮겨가면서 조직 기반은 단단해졌지만 실무 인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업무역량은 위축되었다. 이들 컨소시엄의 인적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현재 KISTI에서 KESL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4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관리직을 제외하면 단 3명이 컨소시엄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21] KERIS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컨소시엄 실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관리직을 제외하면 2명의 실무자가 대학라이선스 업무와 공동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2] 컨소시엄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터무니없이 영세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실무 인력에게서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차치하고 전문적인 협상능력을 지닌 인력 자체가 희귀한 상태이다. 결국, 이러한 인적 한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참여기관들과의 소통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공급사들과의 협상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3]

이렇듯 인력의 영세성과 업무역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컨소시엄 주관기관들이 '참여기관들과의 소통 강화'와 '협상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KESLI가 주관기관으로 협상을 진행했던 전자자료의 최저 인상률이 5.28%인데 비해 ACE가 주관기관으로 협상을 주관하였던 전자자료의 최저 인상률이 2.51%(대학라이선스 품목)와 3.34%(공동구매 품목)라는 통계는 이러한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21) http://www.keris.or.kr/intro/it_organ01_search.jsp [인용 2013. 11. 4].

22) http://www.kisti.re.kr/kisti/org/orgdetailview.jsp [인용 2013. 11. 4].

23) 이렇듯 영세한 업무역량을 가지고 매년 수백이 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해 보인다. 또한 매년 수백이 넘는 공급사들과 가격 및 구독조건에 관한 협상을 준비해 왔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다.

www.kci.go.kr

전략이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참여기관의 의견을 협상과정에 직접 반영하게 한다는 명분을 취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부족한 전문지식과 협상능력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기에 두 컨소시엄에서는 참여기관의 사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 초기부터 가동해 왔다. 구체적으로, KERIS에서는 16명의 대학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대학도서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라이선스 대상 DB와 공동구매 대상 DB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업무와 DB 공급자들과 구독가격 및 조건을 협상하는 업무에 참여시키고 있다. KESLI 또한 관련 전문직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이내의 사서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24] 공급사 혹은 대행사들과 협상을 직접 진행하고 컨소시엄 운영정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두 컨소시엄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서들은 매년 공급사들과의 협상시기가 다가오면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하여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전자자료의 가격 및 구독조건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협상 과정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들 위원회는 참여 위원들의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무엇보다도 위원회 자체가 단일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 위원들의 수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위원들의 위촉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촉된 위원들의 교체가 잦다보니, 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전자자료의 평가와 협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은 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 보니 '위원회'의 설치가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2. 기존 업무행태의 혁신

지금까지 논의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안고 있는 전자자료 관련 고민은 대학도서관계가 스스로 나서 현재의 비합리적인 업무행태를 혁신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한, 더불어 기존의 국가주도형 컨소시엄을 주체적으로 혁신하고자 나서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요원해 보인다. 특히, 기존의 국가주도형 컨소시엄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대학도서관계가 협력하여 실구매자 중심의 '주체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서는 이러한 개선책에 대해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전략과 개별 대학도서관 차원의 미시적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24) 구체적으로, 대학도서관연합회, 의학도서관협의회, 전문도서관협의회, 신학도서관협의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구성한다.

www.kci.go.kr

가.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전략

국가 차원에서의 혁신이 가장 절실한 부분은 기존하는 국가주도형 컨소시엄 체제의 신속한 정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KESLI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해 양대 컨소시엄의 기능적 차이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현재의 경쟁적 이원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실구매자인 대학도서관들에게 실익이 없다. 컨소시엄과 공급사의 협상 과정에서 공급사를 서로 확보하려는 컨소시엄 간의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도서관들에게 불리한 가격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해질 뿐이다. 따라서 현행 이원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양대 컨소시엄의 기능 차이를 가능한 출범 초기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학도서관계를 위한 전자자료의 협상 창구는 ACE로 일원화하고, 전문도서관계(특히 과학기술연구소 자료실을 중심으로 하는)를 위한 전자자료 협상 업무는 KESLI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ACE의 모조직인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와 KESLI의 모조직인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 더불어 대학도서관계와 전문도서관계의 규모와 기능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어떤 조직이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주력하는 것'이 최고의 경영전략이자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은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위한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령, ACE가 출범 초기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해외 전자자료에 대한 국가라이선스 프로그램은 관련 예산의 과감한 증액을 통해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도서관정책이 대학도서관계에서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실효적이 되려면,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의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현명하다. 2013년 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도서관들이 봉착해 있는 자료구입비의 부족 문제, 그리고 모기관인 대학의 규모와 재정에 따라 나날이 심화되는 학술정보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KERIS를 통한 학술정보자원 공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 따라서 국가예산으로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원하는 전자자료 구독비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라이선스 프로그램은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이 국가와 대학 모두에게 득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KESLI 또한 정부와 KISTI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국가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참여기관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컨소시엄의 재원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 역량의 강화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KERIS와 KISTI에서 전자자료 컨소시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인력은 너무도 영세하여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서의 기본 업무 수행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매년 천억이 넘는 돈이 전자자료의 구독을 위해 전국의 대학도서관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컨소시엄의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어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계하는 협상력이 강화되어 진다면, 거칠게 계산하여도 최소 수 십억 원에 이르는 대학도서관계의 자료구입예산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이랴! 대학도서관들이 컨소시엄 주관기관에 요구해 오던 부가서비스의 제공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세분화된 컨소시엄의 구

www.kci.go.kr

성 및 운영, 전자자료 이용통계의 분석 및 제공, 사서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전자자료 관련 세미나 등의 개최, 나아가 전자자료의 아카이빙을 위한 공동 대책의 마련과 같은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컨소시엄이라는 용어의 의미 그대로 기존 컨소시엄이 '참여기관들의 협력체'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문화하고 다양화하고 상설화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표출하고 있는 아쉬움의 하나는 기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 대학도서관들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도서관들은 전자자료 업무에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서들이 그들을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 규모, 성격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가 협상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참여기관들 사이의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로서 상시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컨소시엄에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역량을 갖춘 사서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그래서 참여기관들 뿐만 아니라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사이의 상시적인 소통창구로서 기능하게 된다면, 컨소시엄의 출범 초기에 구축되었던 주관기관과 대학도서관들 사이의 끈끈했던 신뢰성은 조속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한편,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체제 및 운영방식을 혁신하려는 노력에 더해, 전자형태로 생산된 국내 학술자료의 유통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3년 현재, 대학도서관들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은 전자형태의 학술자료에 대한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나아가 기존의 독과점 업체가 '전자자료에 대한 종속성'을 빌미로 삼아 대학도서관계에 무리한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이다. 최근에 국내 최대 전자저널 패키지인 DBPIA의 가격인상을 둘러싸고 공급사인 누리미디어와 KESLI의 협상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다툼은 국가 차원의 전자자료 정책이 해외 공급사들뿐 아니라 국내 공급사들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일깨워준다. 특히, 전자형태의 학술자료를 모아서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를 관장하기 위한 법제의 마련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산된 학술자료를 오픈액세스 영역에 자동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가령, 지금도 KISTI나 KERIS 등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생산된 R&D자료를 DB화 하여 공공재의 형태로 유통시키고 있는 바, 그러한 정책을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고 있는 모든 학술자료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DBPIA 사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25]

25) 현재 국내 주요 학술지의 대부분이 관련 학회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그러한 학술지의 생산 과정에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국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여, 그러한 학술지의 전자파일을 공공재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www.kci.go.kr

나. 대학도서관 차원의 미시적 방안

개별 대학도서관이 전자자료 관련 딜레마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신의 도서관 상황에 적합한 '전자자료 정책'을 스스로 입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의 국가주도형 컨소시엄 체제에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대학도서관들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기존 컨소시엄이 기능적으로 다양화되고 그 성향이 구매자 친화적으로 변한다하더라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전자자료에 관한 대학도서관들의 고민이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국가라이선스 대상 전자자료가 대폭 확장되어 개별 대학도서관들이 아무런 재정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보환경이 조성된다면 모를까, 무리하게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컨소시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전자자료의 과잉 구독을 자초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악수가 될 뿐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대학도서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양적 성장 위주의 전자자료 구독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자신의 도서관 실정에 적합한 전자자료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개별 대학도서관이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전자자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전자자료 전문사서'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이다. 개별 대학도서관마다 전자자료 전문사서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하여, 대내적으로는 전자자료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학도서관협의체' 차원의 협력 업무를 주체적으로 이끌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즉, 개별 대학도서관이 양성한 전문사서들에 의해 전자자료 업무가 '협력적으로' 진행될 때 대학도서관계는 비로소 공급자 중심의 전자자료 유통체계에 저항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갖추게 된다. 생각해 보라!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전자자료 전문사서라면, 빅딜 방식의 전자저널 구독보다는 학문분야에 따른 필수 저널을 가려내고 그를 토대로 선별적 구독을 추진하려 들 것이다. 또한 전자자료 전문사서라면 학문분야별 정보행태의 차이를 조사하고, 특히, 이용행태에 있어 신속성의 차이를 학문분야별로 밝혀내어 실시간 원문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학문분야를 위해서는 NDSL이나 FRIC(외국학술지지원센터)과 같은 학술자원공유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26] 이처럼 전자자료 전문사서는 지금까지의 무분별한 '양적 확충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자 할 것이며, 그를 통해 전자자료 공급자에 대한 종속의 고리를 뿌리부터 끊어내고자 할 것이다.

전자자료 전문사서가 가져올 이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자료 전문사서제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기존의 국가주도형 컨소시엄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계

26) 국가 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해외 전자자료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인쇄자료의 공동 활용을 최대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KERIS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이하 FRIC)' 사업은 매우 적절하다. 2013년 현재, FRIC은 부산대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대학도서관에 주제 영역별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물론 운영 초기여서 아직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모든 대학도서관에 득이 될 것이다.

www.kci.go.kr

자체적인 컨소시엄의 구성이 가능해 진다. 그러한 도서관협의체 중심의 컨소시엄의 가능성은 이미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운영하는 KMLA 컨소시엄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즉, 의학도서관계에서는 의학 관련 전자자료의 실질적인 구매자들이 공급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주체가 됨으로써 개별 의학도서관은 물론이고 의학도서관계의 공동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전자자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다면, 개별 대학도서관은 물론이고 대학도서관계의 공동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함께 상상해 보자! 이 연구에서 사례로 삼은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이 모여서 '거점국립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들 도서관의 전자자료 전문사서들로 하여금 컨소시엄의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고 가정해 보자. 컨소시엄의 운영 주체가 참여도서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전자자료 공급자들과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득은 곧바로 대학도서관들의 혜택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27] 뉘라서 감히 그러한 협력의 대열에서 스스로 고립되고자 하겠는가?

Ⅴ.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전자자료 구독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에 따르는 인쇄자료 구입비의 점진적인 감소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계의 전형적인 자료개발 행태로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자료 중심의 자료개발정책은 디지털도서관이 전통적인 도서관을 온전히 대체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 신봉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대학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도서관사람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아직 학문분야별 기본 장서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인쇄본 자료의 구입을 포기하면서 전자저널과 웹DB의 구독에 몰입하는 한,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이랴! 전자자료의 급속한 확충이 대학도서관의 또 다른 핵심 기능, 즉, 정보적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으로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자자료 중심의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적 기능의 관점에서 전자자료 정책을 고려할 때 대학도서관 운영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저널과 웹DB의 양이 늘어난

27) 가령, 거점국립대학도서관 소속 전자자료 전문사서들이 공급자들과의 협상을 합리적으로 주도하면서 전체 자료구입예산의 5%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10개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이 매년 절약하는 구입비만도 최소한 수억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절약한 비용의 일부만 그들이 설립한 컨소시엄의 운영비로 매년 투입한다면, 그 운영비만으로도 컨소시엄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점국립대학도서관협의체가 만든 컨소시엄은 자생력을 갖추고 더욱 성장해 갈 것이며, 그 혜택은 전자자료 관련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거점국립대학도서관들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것이다.

www.kci.go.kr

다고 해서 대학도서관의 존재 가치가 커지고 사서의 직업적 위상이 덩달아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자자료가 정보매체로서 갖는 가장 큰 특성은 정보중개자의 기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도서관에 정보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정보시스템 개발자들의 관심은 항상 최종이용자들에게 쏠려있었다. 최종이용자들이 사서와 같은 중개자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그들의 노력은 집중되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시스템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으며, 최종이용자와 정보시스템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은 보편적인 탐색행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대학도서관계와 사서들이 서둘러 도입하기를 원하는 전자저널 패키지와 웹DB는 그러한 정보시스템의 정점에 놓여있다.

이쯤에서 찬찬히 돌이켜 보자. 이용자 친화적인 학술정보시스템이 도서관으로 거침없이 유입되면서 도서관과 사서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가? 역사는 긍정적 기여보다는 부정적 폐해가 컸음을 보여준다. 가령, 물리적 도서관의 무용론은 급속히 확산되었고 사서직의 존재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회의적으로 바뀌었다. 역사적 교훈은 전자자료의 무차별적인 도입이 대학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전자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이토록 큰 상황에서 전자자료 구독 행태마저 '비합리적이고 비주체적'이라면,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실제로 2013년 현재, 대학도서관이 수행해 오던 정보제공 기능의 일부는 이미 대학의 다른 기관(가령, 교수학습지원센터, 인력개발원, 산학협력단 등)으로 넘어갔으며, 사서직의 인력 축소 작업은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사서들은 머지않아 대학도서관이라는 배타적 업무공간조차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

이렇듯 다급한 상황에서 전자자료가 갖는 경영철학적 명제에 대해 숙려하고 전자자료 구독 행태를 합리적이고 주체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무엇보다도 전자자료 선정 과정에서의 비합리적 행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빅딜 방식의 수용은 사서의 직업적 전문성의 토대가 되는 '자료에 대한 장악력'과 '이용자 집단에 대한 이해력'을 동시에 저하시킬 뿐이다. 학문분야별 핵심 인쇄자료를 선별적으로 선정하던 시절의 대학도서관 사서는 장서개발자로서의 역량과 정보제공자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갖추어야 했다. 당연히 자신이 선정한 학술자료에 대한 장악력이 따랐고, 자신이 서비스하는 이용자집단에 대한 이해력이 기본적으로 따랐다. 그러나 빅딜 형태의 전자자료 선정이 보편화되면서, 선정에 앞서 간헐적으로나마 시행하던 이용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요구조사'조차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자신이 봉사하는 이용자집단이 선호하는 자료와 그러한 자료의 활용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행태적 특징 등에 대한 사서의 이해력은 고갈되어 버렸고, 이는 곧 사서의 직업적 역량의 퇴보로 결과하고 있다.

전자자료 선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회복 못지않게 계약 과정에서의 비주체적인 행태 또한 조속히

www.kci.go.kr

혁신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학도서관들이 봉착해 있는 전자자료 딜레마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출구전략은 대학도서관들이 모여 설립한 대학도서관협의체가 중심이 되는 전자자료 컨소시엄을 출범시켜 전담 사서들이 운영해 가는 것이다. 이 때, 하나의 협의체가 아니라 모기관인 대학의 정체성, 규모, 성격, 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대학도서관협의체들을 설립하고 그러한 협의체들이 중심이 되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전자자료 컨소시엄(가령, 연구중심대학도서관 컨소시엄, 국공립대학도서관 컨소시엄, 법학도서관 컨소시엄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대학도서관계는 전자자료 공급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업무 역량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길을 향한 노력의 끝자락에서 전자자료 공급자들에게 종속적으로 끌려 다니는 대학도서관들의 모습 대신에 전자자료 공급자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대학도서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준.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정보관리연구, 제41권, 제4호(2010), pp.93-118.

김수연. "한·일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도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5, No.1(2004), pp.283-301.

손정표, 심상순. "전자저널의 이용평가에 관한 연구 : Y대 도서관의 IDEAL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2, No.4(2001), pp.419-447.

신은자. "학술지 빅딜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pp.373-389.

심원식. "해외전자학술자료 확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09), pp.293-311.

이경민. "도서관의 전자정보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사례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0, No.4(2009), pp.177-198.

이란주. "전자저널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2013), pp.247-268.

이용구, 박성재, 김정환. "KESLI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운영현황 및 요구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2013), pp.221-236.

이제환. "한국 대학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p.317-346.

전혜영, 박수희.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39권, 제1호

www.kci.go.kr

(2008), pp.53-82.

정영임, 김정환. “컨소시엄 기반 전자저널 이용통계 수집 및 분석 개선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제29권, 제2호(2012), pp.7-25.d

한혜영, 이중요, 유경희, 임석종, 박연희. “해외학술DB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2권, 제1호(2001), pp.117-136.

한혜영.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전자정보 구독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5, No.1(2004), pp.71-96.

Diana Kichuk. “Electonic Collection Growth: an Academic Library Case Study.” *Collection Building*, Vol.29, No.2(2010), pp.55-64.

David Nicholas, et al., “What deep log analysis tells us about the impact of Big Deals: a Case Study of OhioLink,” *Journal of Documentation*, Vol.62, No.4(2006), pp.482-508.

Frederick Friend. “Big Deal-Good Deal? Or is there a better deal?” *Learned Publishing*, Vol.16, No.2(2012), pp.153-155.

Sarah Sutton. “A Model for Electronic Resources Value Assessment.” *The Serials Librarian*, Vol.64(2013), pp.245-253.

Suzanne Mangrum, Mary Ellen Pozzebon. ”Use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Collection Building*, Vol.31, No.3(2012), pp.108-114.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Han Hye-Young, Lee Joong-Yo, Yoo Kyung-Hee, Lim Seok-Jong, Park Yeon-H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sortium Model for Acquiring Overseas Research Databas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2, No.1(2001), pp.117-136.

Han, Hye-Young. “Analysis on the Electronic Resource Collections in Korean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5, No.1(2004), pp.71-96.

Jeon Hae-Yeong, Park Soo-Hee. “A Study on Electronic Journal Consortium Stakeholder Needs Analysi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ol.39, No.1 (2008), pp.53-82.

Jung Young-Im, Kim Jeong-Hwan. “Improving Efficiency of Usage Statistics Collection and Analysis in E-Journal Consort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www.kci.go.kr

management, Vol.29, No.2(2012), pp.7-25.

Kim Sang-Jun. "Challenges and Solutions of Electronic Journal Consortium."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ol.41, No.4(2010), pp.93-118.

Lee Jae-Whoan.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Academic Library Polic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4(2012), PP.317-346.

Lee Lan-Ju. "A Study of Current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E-Journal Management : Focus o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No.2(2013), pp.247-268.

Lee Yong-Gu, Park Sung-Jae, Kim Jeong-Hwan. "Operation Status and Needs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of KESLI Consorti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30, No.1(2013), pp.221-236.

Lee, Kyung-Min. "A Study of Service Improvement for Electronic Information Room by User's Experience."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4(2009), pp.177-198.

Shim Won-Sik. "Strategies for xpanding Foreign Electronic Scholarly Information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3, No.1(2009), pp.293-311.

Shin Eun-Ja. "Analysis and Proposals Concerning Big Deals of Scholarly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1, No.1(2007), pp.373-389.

Sohn, Jung-Pyo and Sim Sang-Soon. "A Study on Use Evaluation of Electronic Journal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2, No.4(2001), pp.419-447.

www.kci.go.kr

www.kci.go.kr